

##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재성찰\*

윤성이 | 경희대학교

###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을 주장한다. 민주화와 정보화에 따른 정치 환경의 변화는 행위자 즉, 시민의 의식과 능력의 변화를 가져왔다. 민주화와 정보화에 따른 정치환경의 변화는 행위자 즉, 시민의 의식과 능력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행위자의 변화는 자연히 제도의 변화 즉,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동반하게 한다.

정보화와 함께 시민들의 인지능력이 향상되고 성찰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자로 변화하였다. 정보사회의 시민은 탈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 정치적인 것을 실천하는 시민, 자기 조직적 시민, 사회적이면서 개인적인 시민, 그리고 모니터 시민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대의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시민의 정치참여 행태도 제도적 참여보다는 비판습적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우리사회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근본적 요인은 행위자의 변화에 조응하는 제도의 변화가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제어** | 민주주의의 모델, 정보화, 시민의 변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정치참여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05-J08701).

## I. 서론

촛불이 우리에게 던진 교훈과 과제는 모두가 공감하는 바와 같이 소통의 문제였다. 특히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그리고 대표하는 정당과 대표되는 유권자 사이의 소통이 커다란 숙제로 남았다. 그렇다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인다면, 그리고 정당이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를 보다 정확히 대표할 수 있다면 우리사회 소통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서 찾아야 한다.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정립되어 온 대표하는 정치엘리트와 대표되는 국민 사이의 뚜렷한 역할과 권한의 분담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되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정치개혁을 말할 때 가장 우선 대상이 되는 것은 항상 국회, 정당, 선거와 같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제도들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정치개혁은 항상 대의민주주의의 패러다임 안에서 구상되고 실천되어 왔다. 아마도 숭한 정치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대의민주주의라는 기본 대전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2008년 촛불시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2008년 촛불시위는 2001년 효순·미선 추모 촛불집회와 2004년 탄핵반대 촛불집회와는 또 다른 특성을 보이면서, 한국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연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2008년 촛불시위는 운동의 참여계층과 동원구조에 있어 과거의 사회운동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우선 시위 참여 계층이 중고생과 주부로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여중고생에 의해 촛불시위가 발화되는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특히 주도세력이었던 여중고생과 주부들의 경우 전통적으로 정치적 무관심 층으로 분류되었던 집단이었다. 이들의 참여방식도 조직이나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하는 동원된 참여가 아닌 개인 단위의 자발적 참여가 주를 이루었다. 집단과 조직에 대한 거부 의 대상은 진보와 보수, 제도권과 비제도권 정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집단과 조직에 대한 거부현상은 정당,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와 같은 매개집단의 약화 내지는 무력화를 초래하였으며 대의민

주주의의 적실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2008년 촛불시위는 이념, 지역, 세대 갈등이 아닌 민주주의 모델을 둘러싼 갈등, 즉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사이의 갈등 혹은 기존의 제도권 중심의 하향식(top-down) 정치방식에 대한 시민중심의 상향식(bottom-up) 정치참여의 도전을 극명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서구에서는 이미 이념갈등의 시대는 끝났고, 우리도 이를 극복하여야 한다고 하나, 민주주의 실체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권력자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모델과 일반 시민들이 꿈꾸는 민주주의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며, 이는 현재 우리사회 갈등의 근본적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을 주장한다. 민주주의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은 행위자 즉, 시민의 변화에서부터 비롯된다. 행위자는 제도를 창출하고 제도는 행위자를 제약한다. 한편 행위자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새로운 행위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위자의 의식, 능력, 선호가 변한다. 행위자 차원에서의 변화는 제도변화를 만들어낸다(이호철 1996, 65). 민주화와 정보화에 따른 정치환경의 변화는 행위자 즉, 시민의 의식과 능력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행위자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제도의 변화 즉,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동반하게 한다. 현재 우리사회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근본적 요인은 행위자의 변화에 조응하는 제도의 변화가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환경의 변화, 시민의식의 변화, 그리고 정치참여 행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필요성을 고찰한다.

## II. 민주주의 모델 논쟁

민주주의의 실체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검은 비닐봉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것처럼 뚜렷한 형상을 찾기가 쉽지 않다. 즉 봉지 속에 커다란 물체가 잡히기는 하나 그 형상을 설명하기는 매우 복잡하다(Blaug 2002, 104). 한편에

서는 민주주의를 의사결정의 방식(Schumpeter 1966), 혹은 민주적 원칙이 내재된 일련의 정치제도로 이해한다(Dahl 1999). 한편 윤리적 이상에 초점을 두는 이들은 민주주의를 시민적 덕목(civic virtue), 삶의 방식(way of life) 혹은 전체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 간 행위방식 등으로 이해한다(Arendt 1973; Putnam 1992). 이와 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상반된 시각은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하나의 통치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화’를 강조한다. 반면 직접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인민 본연의 가치 실현’으로 보고, 인민의 직접 참여를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전자는 효율성, 책임성 등을 중시하면서 대표, 선거 등을 강조하는 한편 후자는 자치, 인민주권 등을 기반으로 한 구성원들 상호간의 숙의 및 참여를 강조한다.

대의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슈페터(Schumpeter)나 샤희슈나이더(Schattschneider)는 민주주의를 통치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효율성, 책임성, 대표제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정책 결정 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 즉, 대표이다. 샤희슈나이더(Schattschneider 2008)는 복잡한 현실세계에서는 대중이 통치에 관련된 충분한 지식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대표가 필요하며, 인민의 자율적 참여보다는 대표의 선택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슈페터(Schumpeter 1975) 역시 대중은 자신의 일상과 관련된 것만을 현실적으로 다루며, 정치적 사안을 다루어야 할 경우라도 그 행위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선출직 대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의민주주의적 시각에서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정부 및 정당과 같은 제도권과 이에 관여하는 선출직 대표를 통해 실현된다. 인민의 의지 또한 대다수의 의지로서는 절대 대표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한국정치연구회 1992). 인민 대다수의 참여에 의한 결정은 인민의 의지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민의 의지를 왜곡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직접민주주의자들의 시각인 인민의 최대한의 참여에 의한 통치를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다. 결국 대의민주주의는 오랫동안 제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자 혹은 엘리트 중심의 통치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수용자 중심의 자발적

참여는 점점 배제되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직접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인간 본연의 삶의 양식으로 판단한다. 직접민주주의에서의 인민은 공동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인민의 지위 또한 공적 영역에서 다른 인간들과 상호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의미가 있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는 공론장에서의 토론, 심의 및 논쟁을 통해 정치적 평등 원리를 추구한다. 동시에 이것은 곧 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하는 ‘인민에 의한 지배’를 함축한다. 결국 직접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 정책은 인민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된다.

바버(Barber 1984)는 대의민주주의의 대표 기제가 오히려 통치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개인은 정치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대표’가 아닌 ‘참여’만이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인민의 직접 참여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참여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참여는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 획득 그 자체이며, 실제 참여를 통해 참여자의 자기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김대환 1997). 또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민의 직접 참여는 사회적 일체감의 증대뿐만 아니라, 충성심의 확대(Jefferson 1955, 99)를 통한 정치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정부와 시민 사이의 불신은 이들 상호간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참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 모델에 관한 논쟁은 점진적 진화의 노력과 급진적 변화에 대한 갈망 사이의 갈등으로 정리된다(Blaug 2002, 104). 대의민주주의론자들은 엘리트 지배의 책임성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온 반면 직접민주주의자들은 시민의식을 고양하고 엘리트들의 개혁을 강제할 수 있는 급진적 동원과 참여를 만드는 데 더 많은 열정을 쏟았다. 이러한 대조적 시각과 관련하여 블라우그(Blaug)는 민주주의 모델을 현직자 민주주의(incumbent democracy)와 비판자 민주주의(critical democracy)로 구분하여 설명한다(Blaug 2002). 현직자 민주주의는 대의제도를 중심으로 하며 유권자들의 지지에 의해 적자생존이 결정되는 시장경제적 참여를 근간으로 한다. 따라서 최근 민주주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참여의 저하를 엘리트 중심적 의사결정의 질과 정통성이 훼손되는 것으로 우려한다. 또한 이들은 참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수렴하고, 단순화시키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경로를 개선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제도화되고 규칙의 지배를 받는 절차로 인식하며, 여기서 참여는 곧 투표행위이며, 이는 이익 충돌을 판정하고 선호를 조정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이다. 현직자 민주주의의 강점은 효과성(effectiveness)에 있다. 현직자 민주주의에서는 자원의 중앙집중적 통제가 가능하며, 강제적인 법 적용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stability)과 보호(protection)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논리전개가 가능하다. 여기에서 민주주의의 심화는 국민들의 이익이 제도를 통해 정확히 대표되는 것, 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정치엘리트가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현직자 민주주의의 발전은 참여의 효과적 관리를 통해서 가능하다.

한편 엘리트 지배에 저항하는 비판자 민주주의는 제도적 정치활동에서 배제된 주변(periphery)의 참여와 권능(empowerment)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직자 민주주의에서 참여가 시장원리에 기초하고 있는데 반해 비판자 민주주의에서 참여는 광장(forum)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협의적이고, 직접적이며, 발전적이고, 개인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주변의 목소리가 배제되거나 부당하게 강요되지 않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작동한다고 본다(Cohen 1991; Fishkin 1992). 비판자 민주주의는 권위(authority)에 대해 회의적이며 실제적 참여자들의 지식과 합의능력을 높이 사며, 이를 통해 정통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비판자 민주주의도 제도의 최소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는 참여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통제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현직자 민주주의가 참여의 효과성은 제도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비판자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집단적 지지를 보일 때 비로소 참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이들은 참여의 제도화를 급진적 에너지(radical energy)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다. 동유럽의 민주화, 멕시코의 짜파티스타(Zapatists) 봉기, 디트로이트의 혁명적 흑인 노동자 리그(League of Revolutionary Black Workers), 영국 인두세(British Poll Tax) 저항

등이 비판적 민주주의의 사례로 언급된다(Blaug 2002, 106).

대표자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주장은 복잡한 정책 사안이 산재해 있는 현대국가에서 완전한 협의 절차(deliberative procedure)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근거한다(Dahl and Tufte 1974, 23). 하버마스(Habermas 1992, 453)가 언급한 대로 “토론이 통치할 수는 없다(discourses do not rule)”. 비판적 민주주의자들도 참여의 효과성을 구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들은 제도화된 절차를 기반으로 하는 중앙집중적 조직이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수평적 네트워크, 느슨한 단체, 그리고 비공식적 파트너십 등을 통해 참여의 효과성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민주주의 패러다임 논쟁의 핵심 과제는 참여와 효과성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찾는 데 있다(Clark 1996, 113).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서로 다른 관점과 접근 방식은 민주주의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를 드러낸다. 이러한 각각의 차이점은 현대 민주주의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보비오(Bobbio)와 잉그라오(Ingrao)의 대립을 통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20세기 후반 민주주의 논쟁에 있어서 제도적인 차원의 접근 못지않게 시민의 직접행동과 같은 직접적 참여 기제에 대한 의미와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박홍순 2008). 보비오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로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장치를 꼽는다. 그리고 그 장치는 단순히 시민에게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 절차가 마련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언제든지 다수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춘 대의제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언급한다. 이에 대해 잉그라오는 대의제라는 한정된 제도 안에서만 설득력을 발휘하는 보비오식의 민주주의에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시민의 투표 참여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살펴볼 때, 선거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충분한 만족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잉그라오는 시민이 자신의 삶에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직접 결정하여 참여하는 방식을 주장한다.

### III.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정치참여 행태의 변화

민주주의 모델에 관한 논쟁은 한국사회에서도 2008년 촛불시위 정국 이후 뜨겁게 진행되었다. 최장집(2008)은 촛불시위의 촉발 배경을 이해하면서도 그 해결 방안으로 '대표'에 의한 참여 체제의 강화를 이야기하고, 그동안 참여로부터 배제된 세력의 대표성을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김수진(2008) 역시 수용자 중심의 참여민주주의가 지금의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없다고 언급한다. 그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소통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적 과장이 큰 법률, 정책을 추진하려 할 때 시민과 협의, 타협,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반면 하승우(2008)는 촛불시위를 제도정치의 오작동의 결과로 보고, 제도정치 자체에 대한 새로운 고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수용자가 원할 때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참여 방식에서 비로소 인민주권의 원리가 실현된다고 본다.

이처럼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논쟁은 대의제 기능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과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는 주장으로 갈린다. 문제는 민주화와 정보화라는 정치환경의 변화에 대의민주주의 틀이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민주화와 정보화에 따른 정치환경의 변화는 행위자 즉, 시민의 의식과 능력의 변화를 가져왔다. 2008년 촛불은 결국 체계와 이를 대표하는 기존 엘리트의 대의기능 즉 정치적 대의(대통령과 정당), 계몽적 지도(운동조직, 지식인), 그리고 여론의 형성과 전달(미디어)에 대한 일반 시민의 거부이자 공격이라 할 수 있다(전상진 2008, 4). 일반시민들이 기존의 권력과 권위에 대해 거부하게 되는 현상은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첫째, 시민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인터넷 기술발달에 함께 정보습득 능력이 강화되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인지적인 능력이 향상된다. 둘째, 민주주의 발달과 함께 참여 및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시민들의 가치관이 수동적이고 반응적인 대중에서 성찰적이고 능동적인 역할 수행자로 바뀌게 된다. 셋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영리한 대중(smart mob)'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회적이고 기술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인지능력의 향상,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기존 권력 및 권위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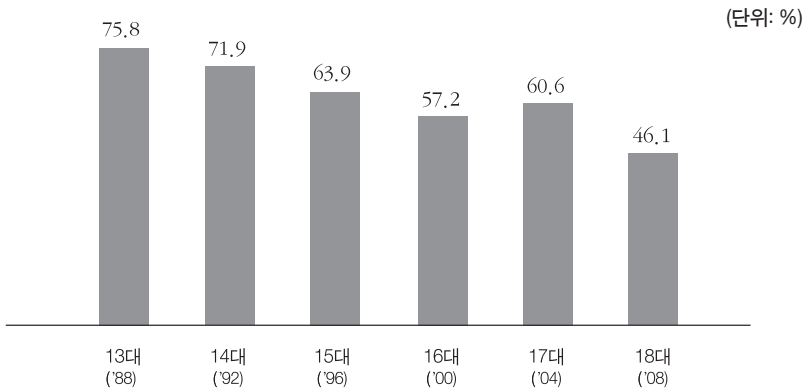
한 시민들의 의존 혹은 신뢰를 약화시키고 참여의 기회비용을 낮추면서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를 증진시키게 된다.

이러한 행위자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제도의 변화 즉,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투표율과 대의제도에 신뢰도, 그리고 거리정치의 확산 등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다음의 <그림 1>과 <그림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1988년 75.8%이던 것이 20년 후인 2008년에는 46.1%로 거의 30%나 감소하였다. 대통령 선거 역시 1987년 89.2%에서 20년 후인 2007년에는 63%로 26% 하락하였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제가 선거라 할 때 가히 민주주의의 위기라 할 만한 투표율 감소현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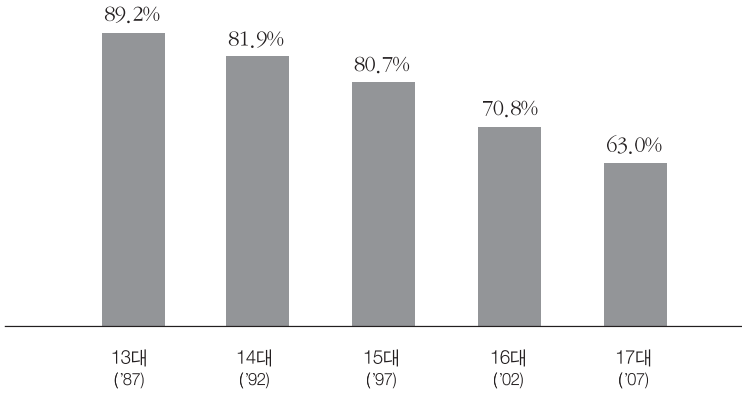
대의제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역시 형편없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2009년 발표된 EAI와 중앙일보 공동조사 <표 1>에 따르면 신뢰도 상위순위는 현대차, SK, LG,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차지하였다. 반면 청와대의 신뢰도는 17 위였으며,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당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최하위에 머물렀다.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투표율, 그리고 청와대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신뢰도는 우리 대의민주주의의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정

<그림 1>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그림 2〉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 투표율



〈표 1〉 기관별 신뢰도 점수 순위 비교

순위	2008년 신뢰도		2007년		2008년 신뢰도		2007년
	기관	점수	순위	순위	기관	점수	순위
1	현대차	6.19	2	12	검찰 민변	4.63 4.63	12 17
2	SK	6.02	3	14	경실련	4.44	16
3	LG	5.86	5	15	교총	4.43	13
4	삼성	5.80	1	16	전교조	4.39	19
5	현대	5.75	4	17	청와대 국정원	4.27 4.27	20 18
6	대법원	5.60	6	19	한국노총 민주노총	4.12 4.12	21 21
7	감사원	4.93	-	21	한나라당	4.11	15
8	국세청	4.83	8	22	민주당	3.96	25
9	경찰	4.78	9	23	뉴라이트	3.94	10
10	전경련	4.75	10	24	민노당	3.89	23
11	참여연대	4.64	14	25	선진당	3.52	-

자료: EAI · 중앙일보 공동조사(2009)

치 환경의 변화로 인한 정치 참여 및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가치체계의 변화는 대의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역동적인 소통과 정보 교류를 촉진시키는 정보화의 발전은 정부신뢰 구축의 새로운 기회구조(structure of opportunity)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도 쉽다. 온라인공간은 정부와 시민 간의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지만, 동시에 양자 간의 대립과 충돌을 촉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부의 경우 더 많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시민들은 온라인공간을 통해 더 많은 목소리를 분출하거나 직접적인 정책결정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부 및 제도권이 시민 참여의 수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양자 사이의 괴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정책 결정에 관계된 이해관계자는 정부의 제도적인 절차를 우회하여, 거리 시위 등과 같은 직접 참여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표 2>를 살펴보면, 제도적인 민주화가 공고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거리 시위의 발생 비율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보화의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시민의 직접 참여가 용이하게 되는 2002년 이후의 시위 발생 정도를 살펴보면,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거리 시위 발생률이 높음을 알 수 있

<표 2> 거리 시위의 발생률

연도	비율(%)	연도	비율(%)
1988	42.0	1998	32.6
1989	60.0	1999	33.2
1990	68.3	2000	12.9
1991	48.1	2001	16.2
1992	48.4	2002	72.8
1993	56.0	2003	82.5
1994	61.5	2004	68.5
1995	37.7	2005	71.7
1996	39.4	2006	50.4
1997	45.4	2007	87.2

자료: Sunhyun Kim(2008, 9)

〈표 3〉 향의 대상

연도	정부 및 제도권	시민 사회 그룹	기업	외국 정부와 국제 제도
1989	48.1	8.7	22.6	2.3
1990	43.7	2.8	24.5	5.3
1991	50.9	13	18.2	0.6
1992	47.4	9.5	17.2	0.7
1993	65.9	5.5	14.8	7.6
1994	59.4	6.6	17.7	5.9
1995	58.1	10.2	17.2	4.5
1996	55.6	3.2	14.1	4.3
1997	60.2	5.8	12.4	5.1
1998	63.9	4.9	14.3	3.2
1999	67.3	5.3	11.8	3.5
2000	64.8	5.8	13.9	0.6
2001	75.5	3.5	7.5	0
2002	67.2	6.8	3.6	15.5
2003	72.8	6.9	4.1	10.4
2004	60.6	13	8.7	3.1
2005	55.5	3.4	21.5	0
2006	59.3	5.2	13.4	7
2007	56.4	8.1	17.4	4.6

자료: Sunhyun Kim(2008, 10)

다. 또한 〈표 3〉을 살펴보면, 정부 및 제도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항상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 결과들은 정부의 역할 및 통치방식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투표와 같은 정치제도를 통한 정치참여율은 지속적으로 하고, 대의제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심각하게 낮은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에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온라인 참여지수는 2003년 세계 12위에서 2008년 2위로 발전하였다. 〈표 5〉를 참조하면 미국 외에 어떤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앞선 순위이다. 그

〈표 4〉 한국의 연도별 온라인 참여지수 순위

	2003년	2004년	2005년	2008년
순위	12위	6위	4위	2위

〈표 5〉 OECD국가별 온라인 참여지수 및 순위

국가	온라인참여 지수	순위	국가	온라인참여 지수	순위
호주	0.8864	5	아이슬란드	0.0682	29
벨기에	0.4091	16	오스트리아	0.4773	14
체코	0.2045	24	캐나다	0.6136	9
핀란드	0.2727	19	덴마크	0.9318	3
독일	0.1591	26	프랑스	0.9318	3
헝가리	0.2045	24	그리스	0.0909	28
아일랜드	0.2500	20	이탈리아	0.2273	22
일본	0.6136	9	<b>대한민국</b>	0.9773	2
룩셈부르크	0.6136	9	멕시코	0.7500	7
네덜란드	0.5227	12	뉴질랜드	0.795	56
노르웨이	0.5227	12	폴란드	0.2273	22
포르투갈	0.2500	20	슬로바키아	0.0682	29
스페인	0.3636	18	스웨덴	0.6591	8
스위스	0.4091	16	터키	0.1364	27
영국	0.4318	15	미국	1.0000	1
			전체평균	0.4689	

자료: UN(2008), Global E-Government Survey

런데 이 같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온라인 시민참여는 지나치게 비관습적(unconventional) 정치참여 행태에 경도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관습적 정치참여는 선거와 같은 제도적 기제에 토대하지만, 비관습적 정치참여는 항의나 집단행동 같은 비관습적 기제를 토대로 한다. 촛불시위로 표상되는 2000년대의 한국의 정치 격변은 온라인공간을 매개한 시민운동의 양상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비관습적 정치참여는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극대화하

여 제도정치에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민 목소리의 지나친 과잉과 이익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할 소지도 다소 있는 것이 사실이다.

#### IV. 정치환경과 시민의 변화

송호근(2003)은 민주화로 인해 새롭게 형성된 한국의 정치 문화가 세계화 및 정보기술의 발달과 맞물리면서 시민의 참여를 증가시킨다고 언급한다. 구체적으로 비전문화, 감성문화, 개방문화, 참여문화, 권리문화와 같이 다섯 가지로 집약된다. 1)비전문화는 권위주의의 청산과 민주주의의 구축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려는 자발적 의지의 촉발을 가져온다. 2)감성문화는 자아실현과 정서적 욕구를 중시하는 경향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한 정치의 전환을 유발시킨다. 탈물질주의에 기반을 둔 감성, 자아실현, 환경과 평화를 강조하는 가치관이 확산됨으로써 다양한 맥락에서 실현될 수 있는 ‘뉴 폴리틱스(New Politics)’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든스(Giddens, 1997)에 의한 ‘생활 정치(life politics),’ 혹은 벡(Beck, 1997)에 의한 ‘하위 정치(sub-politics)’ 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제도적 정치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기존 시각에 변화를 요구한다(Dahlgren 2005). 이러한 정치 환경에서는 이미 선진국에서 주요한 담론으로 회자되고 있는 평화, 반핵, 환경, 여성, 인권, 소비자보호 등의 다원주의적 이슈들이 부상한다. 3)개방문화의 등장으로 다면적 가치와 상대주의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된다. 4)참여문화의 확산으로 서민과 하층민의 대변 기제가 늘어나고,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결사체가 계층적·집단적 이익을 주장하게 된다. 5)시민들이 사적 이익과 권리 의식에 관심을 갖는 권리문화가 등장한다. 결국 이와 같은 변화는 결국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의회 시스템 밖에서 찾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민주화와 정보화로 인한 정치 환경의 변화는 시민의 변화를 초래했다. 현대 사회의 시민은 정보화 세대로 명명할 수 있다. 정보화 세대는 정보화의 보편적

확산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들로 정보지식 및 정보기술을 통해 공통의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집단이다. 정보 기술은 시간과 공간의 압축을 초래함으로써 정치 사회 영역의 상호간 경계들이 훨씬 잘 침투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사적인 삶 등이 더욱 친화적이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생활세계의 경계가 점점 약해지고, 정치의 문화화 현상이 나타난다. 정치커뮤니케이션의 맥락 또한 감성적으로 변화한다. 임혁백(2009)은 정보화 시대의 한국 사회를 ‘신유목화’, ‘신유목적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상호작용의 증가로 나타난 사회적 경계의 파괴에 주목한다. 올리히 벡(2005)은 이를 2차 근대성으로 표현하면서, 산업 사회의 정체성 구조와 국가가 존재론적인 규정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다양하게 중첩되어 있는 형식들 혹은 새로운 정체성들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들이 국가 내의 집단적이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유형들을 파괴한다.

정보화 시대의 확산으로 인한 정치사회 영역의 경계 약화는 시민적 가치 형성에 있어서 변화를 유발한다. 이제 시민은 국가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시민 개개인은 ‘나’를 통해 시민을 만들어가고, ‘나’를 통해 국가를 바라본다. 시민은 사물적 실체가 아니라 주체이다(김상봉 2004, 46). 사물적 실체란 사물적 요소들이 주어지면 존재하는 것이지만 주체는 오직 주체 자신의 반성적 자의의식을 통해서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성적 자의의식이란 주체가 자기를 정립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정신의 능동적 활동이다(김상봉 2004, 46). 따라서 시민은 국가 혹은 시민사회와 같은 물리적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해서 당연히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며, 시민의 특성 또한 그 외적 조건으로 인해 규정되는 것도 아니다. 정보화로 인한 정치 환경의 변화는 시민 개개인이 자기를 정립하고, 나름의 방식대로 삶을 만들어가는 창조적 시민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혹은 정치사회는 시민을 주도하고,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위계적 구조의 주요 행위자가 아니다. 오히려 시민, 정치사회 그리고 국가는 수평적인 네트워크의 독립적, 개별적인 행위자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화 세대는 탈물질적 가치를 지닌 시민,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을 실천하는 시민, 자기 조직적 시민, 사회적이면서 개인적인 시민, 감성적 모니터 시민의 모습을 띤다. 그리고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물질적 가치를 지닌 시민이다. 잉글하트(Inglehart 1977)는 자율적인 개인, 생태적 이슈와 관련한 가치들을 수용하는 개인이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한다. 잉글하트의 이러한 가정은 매슬로우(Maslow)가 발전시킨 동기 이론(motivational theory)에 기반을 두고 있다(Maslow 1954; Huitt 2004). 매슬로우는 개인의 욕구 체계를 피라미드 구조로 구성하였는데, 개인은 음식, 물, 공기 등과 같은 생리적이며, 물질적인 욕구보다 점점 외부적인 인식 혹은 자기 성취와 같은 상징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목표를 추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특성이 곧 탈물질적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며, 탈물질적인 가치를 지닌 개인은 더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고 정치에 더 많은 흥미를 느낀다. 또한 탈물질적 가치는 선거 참여를 자극하는 분명한 요소로써 작용하지는 않지만, 시민 참여의 동기가 된다. 탈물질적 가치를 지닌 시민은 민주적인 과정을 강하게 지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높은 수준의 신뢰를 보여준다. 따라서 정치참여의 수준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 방법 또한 엘리트 중심의 정치에서 엘리트에 도전하는 정치로 전이된다.

둘째,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을 실천하는 시민이다.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인 일상 실천(갈등, 권력게임, 도구 및 운동장)의 세계를 의미한다(올리히 벡 2005). 그리고 이는 정치(politics)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치적인 것은 합리적으로 제도화된 경쟁의 장인 정치보다 더 폭넓은 개념이다. 즉 제도화된 영역만이 아니라 제도화되지 않은 영역에서, 그리고 전통적으로 자유주의가 사적인 영역으로 파악해온 곳에서도 정치적인 것이 실천될 수 있다. 둘째, 정치적인 것은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적인 정치 개념, 즉 정치를 개인권리와 이익의 실현으로 파악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개인을 사회적 장 속에 위치시킨다. 즉 개인은 별개의 단자로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들의 다양성이 새겨지는 주체의 지위(subject positions)의 앙상블로 구성되는 장(site)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Mouffe 1993, 7). 셋째, 정치적인 것은 이성만을 강조하는 정치관을 비판한다. 정치적인 것은 이성이나 합리성 개념 속에 숨겨진 의미에 주목한다.

셋째, '자기 조직적' 시민이다. 이것은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과정이다. 과거에는 가족이나 공동체



의 문화나 가치체계에 의해 개인의 사회적 위치가 결정되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정치사회가 고도로 복잡해지고, 다양한 쟁점들이 얽혀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위치 짓는 문제에 대한 기회와 부담이 점점 개인 각자에게로 전이된다. 결국 시민 개개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규정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조직적 시민은 자기 이익만 챙기고, 갈등만 유발하는 사회의 구성원이 아님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이면서 개인적인’ 시민이다. 이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곧 사회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협동적 혹은 이타주의적 개인주의로 이야기할 수 있다(울리히 벡 2005). 기존의 개인주의는 자기중심주의, 원자화 혹은 고립된 개인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가 강했다. 산업화 시대의 가치 체계는 개인을 항상 집단 혹은 조직에 종속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의 개인주의는 산업화 시대의 생활 방식에서 이탈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시대의 가치는 의무감보다는 자발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대성을 창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성은 소속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다섯째, 시민의 또 다른 특성은 모니터 시민(monitor citizen)과 감성 시민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슛슨(Schudson 1998)은 미국 시민사회를 4개의 시대로 구분하고 각각의 시대를 각기 다른 시민모델을 통해 특정화한다. 18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시민은 정치 엘리트의 리더십에 대한 경의를 강조하는 경외적인 시민(deferential citizen) 모델이, 19세기 초기 이후에는 정당 조직을 통한 대중 참여를 강조하는 당파적 시민(partisan citizen) 모델이, 19세기 후반부터 1950년대까지는 합리적 사고와 정책결정과정의 직접적 참여를 강조하는 식견 있는 시민(informed citizen) 모델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개인의 시민적 권리를 강조하는 권리-의식적 시민(right bearing citizen) 모델이 존재하였다고 설명한다.

스튼은 4가지 시민모델이 유지되기 힘들음을 지적하고 모니터 시민(monitor citizen)을 제안한다. 모니터 시민은 정치적 이슈에 대해 완벽한 정보와 지속적 관심을 추구하지 않는다. 일상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공동체에 대한 주요 위협을 감지할 정도로만 정치적 장면에 주목하다가, 주요한 위협이 감지될 경우 관

런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게 된다. 9·11 테러 이후 미국 시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처럼, 모니터 시민의 정치참여는 위기상황에서 극대화된다. 2008년 촛불시위 시기에 그간 비정치적 집단으로 구분되었던 여학생과 유모차 부대 그리고 비정치적 동호회인 MLB Park, 소울 드레서, 82 Cook 등이 촛불시위에 적극 참여하였던 것은 이들이 모니터 시민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윤성이 2009, 318-319).

모니터 시민에게 있어 '감성(emotion)의 정치'는 '이성(reason)의 정치' 못지않게 중요하며, 이는 정치참여를 동원하는 주요한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이성적 경쟁을 의미하고, 감성은 균형적이고 성숙한 정치 과정과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감성과 이성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드러낸다. 정보화 시대 시민의 감성화는 기존의 감성적 형태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기존의 감성은 치료적(therapeutic) 성향을 띤다(Richards 2004). 치료적 성향을 띤 감성이란 계산된 합리성의 지배 영역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감성을 표현하기보다 이성의 영역으로 교정하고 관리하는 데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민주주의 과정에서 정치는 합리적이고 동시에 감성적이어야 한다(Goodwin, Jasper, Polletta 2001). 효율적인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 정의감, 관심, 신뢰, 정체성 그리고 갈등 또한 중요하다. 정보화 시대의 정치사회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 집단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표출되는 복합적 정치체(mixed polity)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감성은 사적 그리고 공적인 감정을 모두 반영하고 인지함으로써, 이성적 담화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간주된다. 즉 감성적 관여는 이성적 담화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욱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의 정치 영역에서 감성적 경험은 행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양태가 여전히 감성의 영역을 제한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변화된 시민의 다섯 가지 속성들은 독립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요소들이지만, 각각의 특징들은 상호 연관성이 있다. 올리히 벡(2005, 30)은 지금의 시민 개개인으로부터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들이 다음과 같이 공적이고 학문적인 논쟁을 지배하고 있는 몇 가지 가정으로 인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첫째, 자기를 버려야만 타인을 위해 살 수 있다는 '자기 희생'의 가정, 둘째,

남을 위한 봉사는 눈에 띄지 않을 때에야, 즉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런 대가 없이 기꺼이 행하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를 때에야 비로소 숭고하다는 ‘말없는 도움’에 대한 가정, 셋째,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 역시 도움이 필요하며 다른 사람의 봉사를 받는다는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는 가정 등이다. 더욱이 그는 시민의 가치체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정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개인은 위계질서를 가진 조직에 종속된 익명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 V. 결론

그동안 한국 사회는 제도적인 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해 시민의 민주 의식의 향상 및 정치 참여 욕구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정보화의 확산으로 인해 시민의 직접 참여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 기제들의 활성화를 초래했다. 첫째, 온라인 정치참여와 오프라인 정치참여의 융합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즉 조직 중심의 집단화된 정치참여의 양상에서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의 정치참여의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정부 주도의 ‘대의적·제도내적’ 정치참여와 함께 시민 주도의 ‘직접적·제도외적’ 정치참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셋째, 공식화되고 제도화된 정치과정을 넘어서 지금껏 정치 이슈화되지 않았던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까지 정치참여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환경의 변화를 인식한다면, 지금의 시민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참여에 소극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지금의 시민들은 정보 기술 및 미디어 환경 안에서 정치적으로 사회화되기 때문에(Loader 2007), 과거 산업화 시대에서 행해졌던 정치적 행위가 더 이상 현대의 정치 문화와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즉, 민주화와 정보화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동적인 정치 환경의 변화는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자극한다.

정보사회의 정치패러다임을 결정짓는 핵심적 요인은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

크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그리고 집단과 집단과의 관계를 구성하는 요인이다. 비단 정보사회에서만 아니라 이전의 과거 산업사회에도 네트워크는 존재했다. 사회가 존재한 이후로 개인이나 개인들이 구성한 조직, 정당, 의회 등 모든 정치적 단위체들 간에도 네트워크는 존재했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는 네트워크의 속성과 정도가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로 인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각 행위자의 자율성과 네트워크 내의(혹은 간의) 갈등과 조정기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정치과정 전반의 질적·양적 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등장과 확산은 산업사회와 구분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정치 환경이 바뀌면서 정치행위자의 행태가 바뀌고 이에 따라 민주주의와 참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네트워크 정치 환경에서는 정치활동의 중심이 집단이나 조직에서 개인과 이들을 엮는 네트워크로 이동하게 된다. 정보사회의 시민의 특성 역시 항시적 참여를 요구받는 이성적·합리적 시민에서 사회위기 시 적극 참여하는 모니터 시민(monitor citizen)과 감성 시민으로 바뀐다. 정치권력의 특성은 과거 독점적·배타적·절대적 권력에서 소통과 접속이 중시되는 흐름의 권력으로 변화한다.

이와 같은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는 정치행위자의 행태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디지털시대의 시민, 매개집단, 그리고 정부는 과거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행위양식을 보이게 된다.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위로부터 동원되는 참여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참여가 주를 이루게 된다. 정치과정에 있어 시민들은 더 이상 소극적이고 조직화되지 않은 다수가 아니다. 산업사회에서 소수의 조직화된 정치엘리트들이 다수의 대중을 동원하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었던 상황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정보사회에서 시민이 과거에 비해 더 높은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networked individualism) 성향도 동시에 갖고 있다.

정보사회의 정치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정치행위자의 행태변화는 민주주의 방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산업사회에서는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 모형이 대다수 국가에서 기본 시스템의 하나로 정착하였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와 그 기본 원칙인 다수결주의는 정치권력에서 소수파를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이들에게 극도의 정치적 소외감과 좌절감을 강제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이들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할 위험이 높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적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영향 받는 세력과 집단이 모두 그 의사결정의 형성과 집행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김대환. 1997.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참여사회연구소 편. 서울: 창작과 비평사.
- 김상봉. 2004. “민족과 서로주체성.” 『시민과세계』 제5호.
- 김수진. 2008. “촛불집회와 정당정치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경향신문 주최 『촛불집회와 한 국민주의』. 긴급시국대토론회 발표자료집 (2008. 6.16).
- 로버트 달 저. 조기제 역. 1999.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박홍순. 2008. 『대논쟁: 민주주의와 시민 불복종』. 서울: 서해문집.
- 샤츠슈나이더 저. 현재호 외 역. 2008. 『절반의 인민주권』. 서울: 후마니타스.
- 송호근. 2003.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앤서니 기든스 저. 권기돈 역. 1997.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서울: 새물결.
- 울리히 벡 저. 문순홍 역. 1998. 『정치의 재발견』. 서울: 거름.
- 울리히 벡 저. 정일준 역. 2005.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 서울: 새물결.
- 윤성이. 2009. “2008년 촛불과 정치참여 특성의 변화: 행위자, 구조, 제도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7집 1호: 315-334.
- 이호철. 1996. “행위자와 구조, 그리고 제도: 제도주의의 분석수준.” 『사회비평』 14권: 63-85.
- 임혁백. 2009. “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부활과 지속적 발전.” 『오토피아』 제24권 1호.
- 전상진. 2008. “촛불, 전문가지배에 대한 집단지성의 도전?—일반인과 전문가 관계 변동을 중심으로.” 『온라인 세대와 촛불』.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최장집. 2008. “촛불집회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경향신문 주최 『촛불집회와 한 국민주의』. 긴급시국대토론회 발표자료집(2008. 6.16).
- 하승우. 2008. “촛불집회와 진보정당의 과제.” 진보신당·경향신문 공동주최 제2차 긴급시국대토론회 발표집.
- 한국정치연구회. 1992. 『현대 민주주의론 II』. 서울: 창작과 비평사.

Aeendt, H. 1973. *On Revolution*. Harmondsworth: Penguin.

Barber, Benjamin. 1984.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laug, Richard. 2002. "Engineering Democracy." *Political Studies*, vol. 50: 102-116.
- Clark, P. B. 1996. *Deep Citizenship*. London: Pluto Press.
- Cohen, J. 1991. "Deliberation and Democratic Legitimacy." A Hamlin and P. Pettit, eds. *The Good Polity: Normative Analysis of the State*. Oxford: Basil Blackwell. pp. 17-34.
- Dahl, R. A., and Tufte, E. 1974. *Size and Democrac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Dahlgren. 2005. *The Internet, Public Spheres, and Political Communication: Dispersion and Deliberation*.
- Fishkin, J. S. 1992. *The Dialogue of Justice: toward a Self-Reflective Society*.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Habermas, J. 1992. "Further Reflections on the Public Sphere." C. Calhoun, ed.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Cambridge, MA: MIT Press. pp. 421-461.
- Huitt, W. 2004. "Maslow's hierarchy of needs." *Educational Psychology Interactive*. Valdosta, GA: Valdosta State University.
- Inglehart.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efferson, Thomas. 1955. *Notes on the State of Virginia*.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Kim, Sunhyun. 2008. "Civic Engagement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Korea at the Crossroads: Challenges and Prospects*. IKS international conference.
- Loader, D. Brian. 2007. *Young Citizens in the Digital Age*. London: Routledge.
- Putnam, H. 1992. "A Reconsideration of Deweyan Democracy." *Renewing Philosoph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p. 180-202.
- Schudson, M. 1988. *The Good Citizen: A History of American Public Life*. New York: Free Press.
- Schumpeter, J.A. 1975.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Norton.
- UN. 2008. Global E-Government Survey.

[ABSTRACT]

## Reconsidering a New Paradigm of Democracy Model

Yun, Seongyi | KyungHee University

This paper argues that we have need of reconsidering a new paradigm of democracy model, which supplement or replace current representative democracy. Democratization and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ICT) have brought about much changes in citizen's capacity and awareness of democracy. These kinds of changes in citizens should be accompanied by a change of democracy model.

ICT has strengthened citizen's capacity to promote their own political rights and has made them more active participants. Citizens in the information society have characteristics of pursuing postmaterial values, practicing the political, self-mobilizing, networked individuals, and monitor citizen. Since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model failed to be adapted to such changes of citizens, the trend of distrust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is prevalent. A main cause of social conflicts and political instability can be attributed to an incongruent democracy model.

---

**Key Words** | democracy model, information society, changes of citizen, limi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political participation